

삼중전회 재세 해설——재세 시스템 개혁 방향 명확화

2024. 07

Issue 14

개요

얼마 전, 중국공산당 제 20 기 중앙위원회 제 3 차 전체 회의(삼중전회)는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¹(이하 《결정》이라 함)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정》에서는 “재세 시스템 개혁 심화”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거시적 경제 거버넌스 체제 개선” 챕터의 한 부분으로서, 예산제도 개선, 조세제도 개선 및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 개선 등 3 개의 방면에서 향후 5 년 동안 재세 시스템 개혁의 주요 임무와 방향을 자세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산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결정》에서는 “행정권력/정부신용/국유자원자산에 의거하여 취득한 소득을 모두 정부예산관리에 포함”, “국유자본 운영예산과 성과평가제도 개선”, “제로베이스 예산 개혁심화” 등의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조세제도 개선 및 세제구조 최적화와 관련하여, 《결정》에서는 “신규 비즈니스 형태에 적합한 조세제도를 연구한다. 조세법정주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세수우대정책을 규범화하며, 중점 영역과 핵심 단계에 대한 지원 매커니즘을 개선한다. 직접세 체제를 보완하고,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를 상호 결합한 개인소득세 제도를 개선하며, 경영소득, 자본소득, 재산소득의 조세정책을 규범화하고 노동관련 소득에 대한 통일징세를 실시한다. 세수징수관리 개혁을 심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고품질발전, 사회공평, 시장통일에 도움이 되도록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결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개혁 조치들을 제시했습니다: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정력의 조화를 도모하며, 지역균형을 갖춘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를 확립한다.” “지방의 자체 재력을 증대시키고 지방세원을 확충한다.” “소비세 징수단계를 후단으로 옮기는 작업을 추진하고 이를 점차 지방에서 시행하도록 하며, 증치세미공제매입세액 환급정책과 공제사슬을 개선하고 공향세의 배분비율을 최적화한다.” “성시유호건설세/교육비부가/지방교육부가를 지방부가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지방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적용세율을 확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지방정부 특별채권의 지원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중앙의 권한행사를 적절히 강화하고 중앙재정 지출비율을 높인다.”

PwC 는 삼중전회 재세시스템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관찰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

각종 정부 관련 수입을 예산에 포함시켜 제로베이스 예산 개혁을 심화시킴. 《결정》에서는 “예산제도 보완”을 제시했으며, 재정자원 및 예산통합 강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에 대한 거시적 지도 강화, 제로베이스 예산개혁 심화, 예산분배권 통일, 권리의무발생주의에 따른 정부 종합재무보고제도 보완 등 여러 방면에서 고려를 하였고, 예산제도 개혁을 한층 더 심화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까지 재정부의 《정부재무보고 작성방법》, 《정부부문재무보고 작성 가이드라인》, 《정부종합재무보고 작성 가이드라인》 등 여러 제도 및 규정을 공표했습니다.

증치세 개혁은 시장의 기대에 부합함. 《결정》에서는 “증치세미공제매입세액 환급정책과 공제사슬을 개선하고, 공향세의 배분비율을 최적화”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증치세미공제매입세액 환급정책과 공제사슬 개선조치를 중앙과 지방의 관계 부분에 두었는데, 이는 지방의 주요 세원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증치세 공제사슬을 개선하고 증치세미공제매입세액 환급제도의 설계를 최적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증치세를 비롯한 간접세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동시에 기업의 조세행위를 규범화하고 세제의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특징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결정》과 관련된 시행절차를 보면, 증치세 개혁의 구현은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발표한 2024 년도 입법업무계획에 따르면, 《증치세법》에 대한 3 차 심의는 올해 12 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비세 개혁은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의 중요 조치 중 하나임. 《결정》에서는 “소비세 징수단계를 후단으로 옮기는 작업을 추진하고 이를 점차 지방에서 시행하도록 할 것”을 제시했는데, 이는 소비세 세수를 점차적으로 지방 정부로 배분하여 지방 정부의 자체 세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18 개 주요 세목 중 소비세는 증치세, 기업소득세에 이어 세번째로 큰 세목이자, 100% 중앙에 귀속된 세목 중 조세 규모가 가장 큰 세목입니다. 재 정부가 공개한 정보(부록 참고)에 따르면, 2023 년 소비세는 중국 세수의 8.9%를 차지했으며, 관련 세금은 약 1 조 6 천억 RMB 입니다. 2019 년 국무원에서 발표한 《보다 큰 규모의 감세/비용인하 시행 후 중앙과 지방 수입 구분 조정에 대한 개혁 추진 방안》에서는 “소비세 징수단계를 후단으로 옮기는 작업을 추진하고 이를 점차 지방에서 시행하도록 할 것”을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랫동안 시장에서도 소비세 개혁에 대한 호소가 많았습니다. 소비세의 “후단으로의 이전”은 시장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고, 소비력이 강한 경제대성(经济大省)과 인구대성(人口大省)이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관련 세금/비용의 지방부가세로의 통합은 《결정》에서 제시한 새로운 방향임. 《결정》에서는 “성시유호건설세,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를 지방부가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지방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적용세율을 확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였습니다. 성시유호건설세와 교육비부가는 모두 일종의 부가 세금/비용으로, 소비세와 증치세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성시유호건설세,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라는 3 가지 세금/비용을 통합하고 지방에게 일정한 자체 관리권한을 부여합니다. 통합이 되면, 세제는 더 간단해지고 세수징수관리가 용이해지며 납세준수에도 도움이 되는 동시에 지방수입을 안정시키고 지방 세수관리의 적극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세는 직접세 체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개인소득세 개혁은 세제간소화와 세부담공평화에 도움이 됨.

《결정》에서는 “직접세 체제를 보완하고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를 상호 결합한 개인소득세 제도를 개선하며, 경영소득, 자본소득, 재산소득의 조세정책을 규범화하고 노동관련 소득에 대한 통일징세를 실시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임금급여, 노무보수, 원고료 및 특허권사용료 등은 노동관련 소득에 해당되어 연간정산납부 단계에서는 세율의 통일을 실현하였으나,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여전히 다른 세율을 적용하였다가 향후 추가로 세율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 개인 독자기업과 파트너십기업의 투자자 등이 취득한 경영소득은 노동관련 소득의 성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지만, 현재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 각각의 세율과 계산방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납부 문제가 비교적 복잡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소득의 성격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아울러 경영소득과 종합소득 간 세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징수납부 실무상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향후 경영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합산과세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자본소득과 재산소득의 경우, 《결정》에서는 “이를 규범화할 것”을 제시했는데, 한편으로는 관련 조세 정책의 보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분야의 세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감독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수징수관리 개혁의 심화. 국무원법제판공실은 2015 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개정안(의견수렴본)》을 발표한 바 있으나, 세수징수관리법의 입법 절차가 최근 몇 년 동안 몇 가지 세수실체법의 개정에 비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1 년 3 월 중공중앙판공청 및 국무원판공청에서 《세수징수관리 개혁의 추가 심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후, 중국 세수징수관리 개혁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예: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성시에서 세금사전심사제도를 시범 시행하여 세수징수관리법의 다음 단계 개정에 대해 기반을 마련했음). PwC 는 세수징수관리법의 개정이 향후 재세 개혁 업무의 중점이 될 것임을 예상하며, 납세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새로운 초안에 대해 건의사항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녹색 조세제도의 개선. 《결정》에서는 “녹색저탄소 발전 매커니즘을 보완한다. 녹색저탄소 발전을 지원하는 재세, 금융, 투자, 가격 정책과 표준 시스템을 실행하여 녹색저탄소 산업을 발전시키고 녹색 소비 인센티브 매커니즘을 보완하며 녹색저탄소 순환 발전의 경제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의 녹색 조달 정책을 최적화하며 녹색 조세제도를 개선한다.”고 하였으며, “엄격한 수자원 규제 시스템을 구현하고 수자원 비용의 세금 전환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의 녹색 조세제도는 이미 구축되었지만, “쌍탄소(탄소피크&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생태 문명 시스템의 개혁을 심화시키기 위해 삼중전회에서는 “쌍탄소”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녹색 조세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시함으로써 녹색 조세 시스템의 중요성을 드러내었습니다.

수자원 비용의 세금 전환과 관련하여, 중국은 2016 년 7 월 1 일부터 하북성에서 수자원 비용의 세금 개혁을 솔선수범으로 시범 시행했으며, 2017 년 12 월 1 일부터 북경, 천진, 산서, 내몽고, 산둥, 하남, 사천, 섬서, 닝샤 등 9 개의 성/자치구/도시로 확대 추진했습니다. 수자원세의 납세자는 지표수, 지하수를 직접 취수하는 단위와 개인이며, 수자원세의 과세 대상은 지표수와 지하수로, 종량과세를 채택합니다. 수자원세 개혁의 시범 시행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불합리한 수자원 사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수자원세 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해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에 대한 조세제도에 주목. 《결정》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를 연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는 과학기술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최전선이며, 과학기술, 경제 및 국제 무역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의 발전은 전통적인 조세제도와 징수관리에 있어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의 발전에 적합한 조세제도를 구비하고 제도의 비용을 낮추며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인지가 중국 조세 개혁의 새로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세제도와 신흥 경제 간의 호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깊이 연구하여 신흥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시스템 매커니즘을 개선하고, 조세 등 영역의 다자간 협력 플랫폼 구축을 강화. 《결정》에서는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 구축 매커니즘을 개선하고 추진한다. ‘일대일로’ 과학기술 혁신 행동 계획을 계속 실행하고 녹색발전, 디지털경제, 인공지능, 에너지, 조세, 금융, 재해감소 등 영역의 다자간 협력 플랫폼 구축을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결정》에서는 “개방이 중국식 현대화의 선명한 특징”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 구축 매커니즘을 개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발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어젠다를 포함한 여러 다자간 협력 프레임워크의 구축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방의 자체 재정력 강화, 중앙지출 비중 제고 및 이전 지출 개선. 《결정》에서는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정력의 조화를 도모하며, 지역균형을 갖춘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를 확립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정책 방향은 중앙의 지출 비율을 증가시키고 지방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결정》에서는 지방의 자체 재정력 증가, 이전 지출 시스템 개선, 특별채권과 지방정부 채무관리 최적화, 지방의 지출 책임 경감 등 방면에서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핵심 요약

삼중전회 재세 개혁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지방 재정력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결정》에서는 지방의 자체 재정력을 증가시키고 지방 세원을 확대하며, 지방의 세수관리권한을 적절히 확대하고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재세 조치를 제시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1) 소비세 지방 시행의 안정적 추진. 2) 증치세미공제매입세액 환급정책과 공제사슬의 개선 및 공항세 배분비율의 최적화. 3) 지방부가세 세율 설정 권한을 지방에 부여. 4) 재정 이전 지출 시스템의 개선 및 일반 이전 지출 증대.

2023 년에 공표된 《제 14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 계획》에 따르면, 증치세법, 소비세법, 관세법과 세수징수관리법은 모두 제 1 유형의 항목(즉, 보다 성숙한 조건을 갖추고 제 14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5 년 임기 내에 우선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제출할 법률 초안)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여기서, 《관세법》은 올해 4 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12 월 1 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증치세법(초안)》의 3 차 심사는 올해 12 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무원의 2024 년도 입법업무계획》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소비세법 초안, 세수징수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조세 입법 방면의 중점을 소비세법과 세수징수관리법에 두며, 이와 더불어 성시유호건설세,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라는 3 가지 세금/비용의 통합작업과 개인소득세 제도의 개선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몇차례 《증치세법(초안)》 내용을 보면, 증치세 입법은 주로 기존 정책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징수관리법의 개정은 세금 이자 및 연체료, 벌금 기준, 소급 기한, 분쟁 해결 매커니즘, 정보 공개 등 중요한 내용과 관련될 수 있으며, 모든 기업 및 개인 납세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소비세 개혁은 관련 산업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떤 산업의 징수단계가 후단으로 이전될 지, 세목과 세율이 조정될 지 여부 등이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PwC 는 관련 정책의 시행 및 발표에 면밀히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관찰과 이해를 적시에 공유드릴 것입니다.

주석

1.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
https://www.gov.cn/zhengce/202407/content_6963770.htm

부록: 현행 18개 세목의 세수비중 및 배분방식

수입 레벨	세목	2023년 세수비중	비고	중앙 비율	지방 비율
중앙세: 중앙 정부의 재정 수입으로서 세무국과 해관이 징수	소비세	8.9%		100%	
	관세	1.4%		100%	
	차량구치세	1.5%		100%	
	선박톤세	<1%		100%	
지방세: 각급 정부의 재정 수입으로서 세무국이 통일 징수	토지증치세	2.9%	부동산전용세		100%
	계세	3.3%			100%
	방산세	2.2%			100%
	성진토지사용세	1.2%			100%
	경지점용세	0.6%			100%
	차선세, 연엽세, 환경보호세	<1%			100%
중앙과 지방의 공향세: 중앙과 지방이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 재정 수입으로서 세무국이 징수	증치세	38.3%	해관이외의 기관이 대리 징수하는 증치세	50%	50%
			해관이 대리 징수하는 증치세	100%	
	기업소득세	22.7%	중앙기업, 지방 은행과 외자은행 및 비금융기업, 각 은행 본점, 철도부문, 각 보험사 등이 납부한 부분	100%	
			기타 기업이 납부한 부분	60%	40%
	개인소득세	8.2%		60%	40%
	성시유호건설세	2.9%	중국철도 본사, 각 은행 본점, 각 보험사 본사가 집중 납부한 부분	100%	
			기타 부분		100%
	인화세	2.1%	증권거래 인화세	100%	
			비증권거래 인화세		100%
	자원세	1.7%	해양석유기업이 납부	100%	
비해양석유기업이 납부				100%	

자료 출처: 재정부, 공개 정보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김도현 **Partner** (86) (10) 6533-3596 dh.kim@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지영 **Director** (86) (10) 8553-1114 jiyoung.j.yu@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원택 (86) (10) 6533-6416 won-taek.w.kim@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Partne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수연 (86) (21) 5368-4085 suyon.s.kim@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광주 (회계감사 & Tax) 최영기 (86) (20) 3819-2531 younggi.y.choi@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참고로, 저희의 지난호 뉴스플래시(영문/중문/국문)는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n.com/en/services/tax/publications/taxlibrary-chinatax-kr.html>



全维度中国税务资讯平台“税界”3.0全新上线 不止于随身知识导航，更是你的专属税务智囊



苹果手机下载
(iOS 10以上)



安卓手机下载
(Android 6.0以上)



- 安卓手机也可以在腾讯应用宝中搜索“税界”进行下载
- “税界”网页版链接：<https://shuijie.pwccn.com>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资料于2024年7月29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咸永道之网页：<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www.pwccn.com

© 2024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